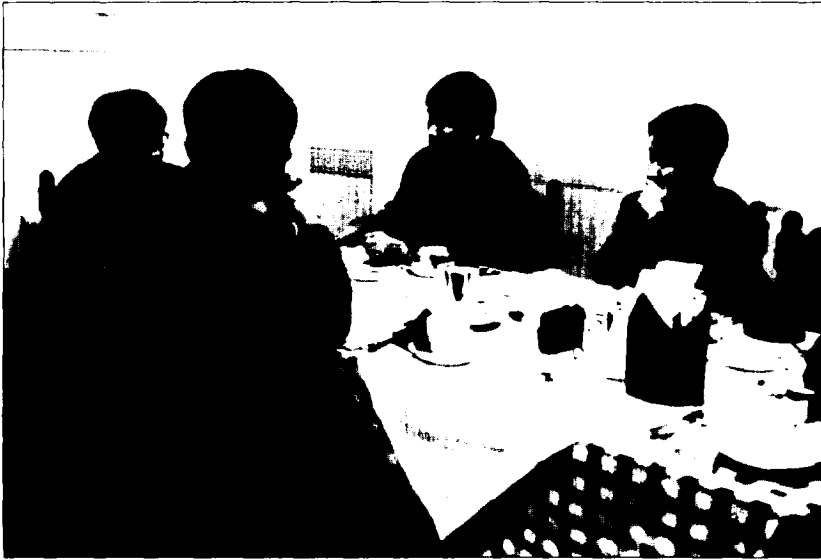


우리 시대 ‘진보’란 무엇인가



98년 오늘의 세계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사회주의 이념이 퇴조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신자유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맑스주의의 매력이 상실되면서 유럽에선 이미 80년대부터 생태주의 등 새로운 대안들이 모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세계문명사를 지배해 온 계몽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회의와 비판 속에 포스트모더니즘, 해체론, 허무주의 같은 세기말적 현상들도 나타났다. 국내정치는 50년 만에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며, 경제는 IMF 관리체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해방을 지향했던 진보진영은 현재 진보의 이념이나 방향, 운동의 진로를 고민중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거기에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길』은 각기 다른 운동을 경험하고 고민해 온 참석자들을 초청해 “우리 시대에 진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좌담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참석자

김홍준 : 성공회대 교수

최규협 : 국민승리21 정책위원장

김태현 : 민주노동 기획국장

김성기 : 한양신학대 교수

일시 : 98년 3월 10일(화) 10시~2시

장소 : 세실 레스토랑

신자유주의 시대에 '진보'란 무엇인가

김동춘 : 현존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그와 더불어 국가 개념적인 발전모델, 즉 유럽식 복지국가나 동아시아적 성장 모델이 90년대의 신자유주의 혹은 세계화 물결 속에서 해체 내지는 약체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파편화되고, 정치적으로는 일국 내에서의 타협이나 변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더해 정보화 현상도 있고, 여러가지 문화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에 진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것이 진보의 노선인가 하는 점이 새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공동체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세력들도 있고, 윌러스턴처럼 먼 미래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소수이긴 하지만 트로츠키주의자들 같은 경우 전 세계 노동자들의 계급적인 단결을 통한 세계자본주의의 전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나 시장의 전횡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나에 대해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룬 국면에서 IMF 사태를 맞게 되었는데, 지난 30여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세력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기 : 지금 우리가 당면한 세계화를 시대변동의 한 단계라고 할 때 결국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세계화는 미국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배질서가 규범적인 것으로까지 포편화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우울한 현상이고, 21세기가 여전히 미국의 세기일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패권에 기반한 세계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비판적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미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는데, 진보를 염두에 둘 때 이는 관건적 질문이 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시대의 진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시대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인 미국의 정체가 무엇이

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그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가장 바람직한 대안질서를 제시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자유주의 흐름이 거역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진보의 지향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시선 모으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가 의미있는 것이기도 하구요.

최규업 : 결론부터 내리자면, 저는 “먼 미래의 무엇”,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진보적 이론이란 게 인류를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하는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그 진보이론이 30년을 넘어가는 전망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잘 알 수도 없는 일구요.

세계화의 문제는 생산력 측면에서 보자면, 극소전자혁명, 금융자본의 발달, 이런 요소에 의해서 상품과 자본, 심지어는 노동까지 국경을 무시하면서 이동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것 자체는 생산력의 발달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현재의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체제가 미국의 패권적 이해를 보장한다는 것이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 혹은 제3세계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세계화는 단순히 필연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련, 동구 붕괴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특히 이들 국가들의 진보세력과 비정부기구(NGO)들의 공동대응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노동운동 측면에서는 사실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담론 이후 세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어요. 최근 세계적 과잉축적, 과잉자본의 유통화 등으로 말미암아 국민국가들이 위협받고 있는데, 신자유주의가 국제적인 자본의 이해와 더불어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대두되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IMF 구제금융을 맞아 이제까지의 자본의 흐름은 국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자유화하는 추세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운동의 관점도 과거의 민주운동 시대와는 달리 넓은 잔재의 척결에

더하여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항하는 과제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실 운동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제적 연대입니다. 진보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대항하는 사회의 근본적 재편, 민주적 대안, 이런 것을 중심과제로 삼고, 거기서부터 중기적 과제를 도출하고 장기적 과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규엽 : 한 마디 더 추가하자면, 세계화에는 생산력 발전에 의해 수반되는 측면 이외에도 자본주의의 위기로 추동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유럽에서 나타나는 실업률을 보세요. 미국조차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실업률은 5~6퍼센트거든요. 자본주의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맑스주의의 의미

김동춘 : 제 생각에도 공동체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운동으로서 협동조합 운동이나 소집단운동 등은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전체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고,

세계 자본주의의 당장의 재편도 아직은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국가, 즉 국가의 변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봅니다. 오늘의 국면은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즉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망하면서 파시즘으로 넘어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냉전체제로 가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는 다시 고전적인 자유경쟁 자본주의와 유사한 신자유주의가 돌아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모순을 낳을 것이며, 어떤

형태로 반전될 것이고, 그 반전의 과정에 다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가 고민의 중심이구요. 저로서는 새로운 진보의 이념을 '신인간주의'로 불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교권이나 신의 지배에 대항하여 인간을 강조하였고, 그것이 나중에 시장이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으로 나타났는데, 자본주의가 지속되

면서 그것이 결국은 반쪽만의 인간해방으로 그치고 오늘의 시점이 도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인간주의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 맑스가 제기했던 노동계급 주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지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혁, 반격, 혹은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할 때, 개인의 차원으로 돌아가서 도덕이나 양심의 문제로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가 아니면 새롭게 변혁의 주체를 설정해야 하는가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규엽 선생님의 말씀대로 진보가 인간을 모든 고통으

로부터 해방시켜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누가 이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이들로서 선두에 나설 것인가, 아니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진보의 선두에 선다는 생각 자체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기 : 현재 우리가 더 나은 삶의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맑스주의가 갖는 의미는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보



김동춘 1959년 생. 서울대 사범대 졸업. 동 대학원 사회학 박사. 현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저서로 『한국사회학의 새로운 모색』, 『분단과 한국사회』 등이 있음.

니다. 저는 유토피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토피아는 현실을 비판하는 규범적인 역할을 합니다. 맑스주의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어떤 처지에 처했든, 인간해방과 평등한 삶을 늘 반추하게 하는 어떤 그림이죠. 바꿔 말하면 전세계가 초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이 그런 대세를 거슬러 나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밤길의 별빛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별빛을 보고 누가 선두에 나설 것인가, 어떤 사회 성원들이 맑스주의라는 유토피아적 청사진을 보고 앞에 나설 수 있는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전에는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은 진보라는 대의를 주장하는 성원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집단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그래서 노동운동이나 신사회운동이나 하는 식의 망설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하는 문제 또한 지금 현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현 : 우리에게 맑스주의는 세계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최근에 발흥했다가 너무나 빨리 몰락했죠. 외국에서는 올해 「공산당선언」 출간 15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 맑스가 제기한 문제들이 지금의 세계화라는 상황에서 상당히 설명력이 있다고 봅니다. 맑스가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했던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저항, 대중투쟁의 담당자로서의 노동자계급, 이런 원칙들은 지금도 여전히하다고 봅니다. 단지 그 시대의 한계로서의 측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물질적 생산에 대한 과도한 기대, 즉 생산력주의 같은 것 말입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밖에도 권력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이 맑스가 애당초 제기한 식으로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들은 맑스 당대에 제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고, 우리가 맞서서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세력이 진보의 담당자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현실 속에

서 긍정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87년 이후에 사회운동이 성장했고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에는 시민사회운동이 자기의 영역을 개척했지만, 시민사회운동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불려지듯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세계화와 더불어 자본의 문제가 중심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고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독자성을 가지고 투쟁할 수 있는 세력은 결국 노동세력이 아닐까요? 따라서 유일한 진보의 담당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주요한 담당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최규업 : 저는 79년에 대우중공업에 들어가 노동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별로 확신을 하지 못했어요. 노동자들을 믿으면, 실리적인 입장에서라도 뭐가 되긴 되려나 의심하고 그랬죠. 하지만 제가 노동운동을 하고 진보운동을 하면서 느낀 결론은 "역시 맞다"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를 하자면,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을 봤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무인자동공장이 생기고 그래서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자는 이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저는 과연 그것들로 해결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느낀 것은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맑스가 실업자들의 발생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실업자들이 노동자들이고, 따라서 보수집단이 주도하는 체제 때문에 고통받는 진보운동의 담지자라는 것도 옳다고 보는 것이죠.

한국사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김동춘 : "진보운동의 위기는 진보를 표방한 사상가들의 위기이지 진보 자체의 위기는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더군요. 맑스주의의 위기라는 것도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오류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전공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조직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점이죠. 조직이라는 틀이 노동계급의 운동을 보수화시키기도 했고, 변질, 타락시키기도 했는데, 노동

운동을 자본주의 제도 내 대항운동으로 생각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맑스주의나 집산주의는 다 틀렸다 하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성 억압이나 환경문제, 이런 각 영역으로 스며들어서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맑스주의나 계급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현실을 좁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사회 현실로 넘어가 보죠. 오늘의 한국사회, 한국자본주의를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80년대에는 독점자본주의다, 종속자본주의다, 국가독점자본주의다, 신식민지다,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다, 식민지다 (웃음) 이렇게 이야기들 했는데, 10년 지난 지금엔 뭐라 이름 붙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국에서 진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범위, 대상이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혹은 김성기 선생님 말씀처럼 모두가 미국화되는 신자유주

의 세계화 시대에 그렇게 일국적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의문도 듭니다.

최규엽 : 저 자신도 88년, 89년도에는 한국 사회성격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자료도 모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죠. 이유는 우리의 경우 워낙 모순이 극명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IMF체제 하에서 자본주의의 모습, 더 나아가 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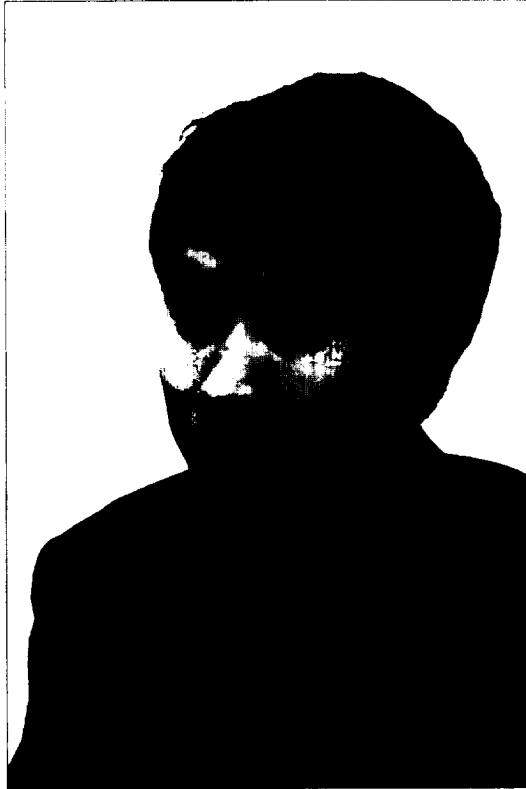
의 경제적 지배의 모습, 미국이 직접 주도하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볼 때 한국사회가 종속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운 형태의 종속인데, 이를 그냥 종속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식민지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종속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신식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지배세력의 통치

역시 그 스타일이 변했을 뿐이지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그리고 독점자본주의의 문제가 있는데, 이 건 잘 모르겠어요. 독점자본을 뭐라고 개념 정리해야 할지, 현재 우리 사회의 재벌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분명히 건 우리나라 경제가 남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성기 :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은 한국 진보이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대중소비사회의 부상에 따른 대중의 인식 변화를 미처 따라잡지 못했던 한계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한국사회의 성격 규명은 오히려 지금 더욱 중요한 과제

임에 틀림없습니다. 일상적인 감각으로 말하면 오늘의 한국사회는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러다가 좌절한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변혁에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그와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도 약화되고, 반면에 무력감이 팽배하면서 새로운 파시즘의 조짐조차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 노동계급이 변혁의 주체가 못 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규엽 선생님이 지적



최규엽 1953년 생. 고려대 독문과 졸업. 현 국민승리21 정책위원장 겸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저서로 「노동조합사전」과 역서로 「소비에트노동조합운동사」 등이 있음.

하신 대로 노동계급이 진보의 주체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맞는 말', 즉 진리가 현실적인 것이 못하고 있는냐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우리 사회의 변혁 주체를 내생적으로 형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술, 문화의 변화를 넉넉하게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수동적으로 휩쓸린 결과 오늘의 상황을 초래한 게 아닐까요. 소비문화도 마찬가지죠. 노동자들이 소비문화를 자기 삶의 성숙을 위한 자원으로 끌어당기지 못하고 도리어 거기에 편입되어서 그 배후에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얽매어졌던 것이죠.

김동춘 : 한국사회를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전통적인 맑스주의 개념을 전제한 것인데, 지식사회나 정보사회라는 용어로 개념화했을 때는 방향을 전혀 다르게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기 : 정보사회론은 일종의 탈자본주의론이죠. 기존의 자본주의론에 입각한 한국사회 인식이 편협하다,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보사회론이나 지식사회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은 이론과 현실 사이의 부조화를 일으킨 게 아닌가, 현실을 바라보는 데 착시를 일으킨 게 아닌가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문제틀의 좌절에 따른 피해의식이 정반대편으로 너무 휘어진 느낌이 있다는 말이죠. 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식인 사회의 슬한 논의도 그런 급격한 진동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이나 운동진영은 시간 낭비를 할 수 없습니다. 운동진영은 당장 IMF나 WTO와 관련해서 우리의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를 고민해야 하죠. 이와 보조를 맞추어 이론진영은 앞서 언급한 시선의 굴절을 어떻게 정상으로 되돌릴 것인가,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읽어낼 것인가 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자본주의라는 분석틀도 여전히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고 정

보사회론도 마찬가지죠. 그런 논의들이 서로 경합하면서 인식상의 거품을 빼고 한국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김동춘 : 그럼 김성기 선생님도 돌아오시나요? (웃음)

김성기 : 제 생각은, 일단 문화영역은 분명히 포스트모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중매체, 탈산업적 테크놀로지, 교통 및 통신체제 등에 기반해서 미국식 소비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는 사회 성원들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은 완벽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2 또는 4분의 3이라는 다수는 철저히 희생될 것입니다.

지식인들이 가져야 할 문제의식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하나의 균질적인 사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적 삶의 방식을 모델로 하여 전세계적인 소비사회가 생기고 있는데, 이는 맑스가 말했듯이 다른 민족, 다른 사회의 형성은 아닐까요. 소수는 첨단 테크놀로지에 기반해서 자기 삶의 가능성을 만끽하고 표현할 기회가 많아지지만 다수는 그에서 배제되는,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만의 문명에 박차를 가하자는 소리 높은 구호에 맞서 아무리 가날뜨더라도 저항과 거역의 정신을 일깨우는 슬픈 엘레지를 부르지 않을 수 없겠지요.

김태현 : 한국사회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독점자본주의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IMF와 관련해서도, 멕시코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막상 멕시코에 가보면 수백 만의 실업자, 초국적 자본의 직접 지배 등이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춘 : 그래서 학계에서는 종속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80년대 종속이론을 너무 쉽게 폐기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동아시아는 남미와는 다르다고 봤는데,

이제는 오히려 남미와 비슷해지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80년대식 논의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본형, 미국형, 유럽형, 남미형 자본주의를 놓고 논쟁이 본격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성기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는 탈 산업화, 소비사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토대에서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지금 사회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은 80년대 학생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당장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을 못할 상황인데도 워낙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분노도 표출하지 않구요. 이 현상을 어떻게 바꿔내야 할지...

최규업 : 한 5년 후쯤에는 달라지지 않겠어요? IMF 시대에 실업자 아버지를 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될 것이고, 그 때 되면 달라질 거예요. (웃음)

운동진영의 연대와 의사소통

김동춘 :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긴장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아 사태가 터졌을 때 기아노조의 기아 살리기 운동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고민에 맞닥뜨렸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기아를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기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기아를 살리는 게 옳으냐 하는 것이었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사안이 계속 터질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 김태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태현 : 기존의 전국연합으로 대표되는 전체 운동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주요 운동이 전국연합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현재 중요한 과제인 IMF 사태와 신자유주의, 반재벌, 사회개혁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대기구(편집자 - 민주연대)가 결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연대 중심이냐 전국연합 중심이냐는 식으로 이를 조직 문제로서 끌고갈 수는 없구요.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그러한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고 발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때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10년 동안 노동운동, 즉 1세대 노동운동이 걸어왔던 한계가 분명히 있죠. 민주노총 조직만 해도 그동안 3대 조직의 봉

합 수준에서 유지되다 보니까 한계가 많은데, 앞으로 공동투쟁의 중심에 서서 이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사소통과 연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도자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이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기 :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의 정체성은 결국 저항의 거점 문제거든요. 저항 공간의 차이일 뿐인데도 그들의 갈등이 자기운동 우선주의 같은 것으로 잘못 나타나고



김태현 1957년 생. 서울대 법대 졸업. 현재 민주노총 기획국장

있는 것 같아요. 진보의 장애물인 시장화의 전일적 지배 상황을 두고서 전면적으로 저항하든 부분적으로 저항하든 공히 그것의 극복을 모색하는 세력이라는 공통인식 아래 폭넓은 배후진, 즉 대안적 세력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배후를 마련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진보운동의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각 운동 주체들이 기존의 정치권력과 개별적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저항의 연대를 맺고 의사소통 기구를 공유하면서 정치권력과 단체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대중 정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21세기를 맞는 진보운동,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운동이 김대중 정권의 성격을 둘러싸고 헛갈리고 있는 현상들은 가급적 빨리 수습되어야 할 터인데, 김대중 정권—물론 5공 정권 같지는 않겠지만—역시 극복되어야 하는 정권이라는 점을, 특히 시민운동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진보라는 일치된 목표 하에서 의사소통과 연대의 원칙을 지키는 게 김대중 정권 하에서의 진보운동의 과제라는 것이죠.

최규업 : 소위 순수한 시민운동은 없다고 봐요. 정치나 정당, 정파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계급문제 등에 올라보 개입해 들어가지 않고서는 시민운동은 행동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운동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올바른 노동-시민운동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진보적인 시민운동들이 결합해서 항상적인 연대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연대들이 폐쇄적이거나 패권적이어서 안 되겠고 원칙은 지키되 폭은 넓은 틀이 되어야겠지요. 사실 전국연합의 재편 논의는 이미 95년도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예전 재야세력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관변단체—그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예전에 제가 선배로 생각했던 분들이니만큼 이런 말을 쓰긴 싫지만 정권을 지지하니까 반(半)관변단체임에는 분명합니다—로 조직되고 있어요.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루 빨리 항상적인 틀을 만들어서 IMF의 힘든 국면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동춘 : 시민운동이 왜곡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노동운동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노동운동이 자신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과거 재야운동은 정치적 과제를 담당할 기반을 상실한 데 반해 노동운동은 아직 그럴 능력을 갖지 못한 상황, 노동자들의 삶과 비교적 가까이 있는 사안인 세제, 복지, 교육 등에서조차 이를 자기 과제로 받아안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식인 주도로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이 현재의 시민운동이라는 것이죠. 노동운동이 성장해서 현재의 시민운동의 과제들을 자기 과제로 흡수하고, 나머지 공직자 비리 문제 같은 것들은 전문가 운동으로, 즉 법조인, 혹은 교수, 공직자, 공무원 노조 등이나 혹은 정당으로 분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이 자기 지평을 넓히고 정당운동이 서고 하면 현재의 시민운동은 향후 5년 정도 안에 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시민운동 자체는 주민운동, 지역운동으로 발전해서 지역적 사안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되어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도 왜곡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김대중 정권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정권교체란 것이 민주화인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 정권교체조차 개인적으로는 '반(半)적인 정권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권도 김영삼 정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지지기반이 될 사회세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김대중 정권의 기반을 구체적으로 들자면—전라도의 지역 기반 이외에는—아마도 민주화와 정권교체에 대한 의명의 시민들의 힘, 즉 여론의 힘일 것입니다. 초기 6개월, 1년 정도는 그 힘에 의해, 그리고 그 힘에 기반한 김대중 개인의 헤게모니에 의해, 일정한 개혁정치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엔 다시 적나라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부상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상대적 진

보성은 그 이후엔 수구세력, 재벌과 반공 분단세력들에 의해 동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김대중 정권과 진보운동

김태현 : 역대 정권이 갖고 있던 재벌-관료-지역 연합을 벗어났다는 점, 그리고 운동권의 발목을 잡고 있던 대중정서의 일단을 극복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권의 의미가 없지는 않죠. 하지만 분명히 그 지향에 있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과거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제어만을 내세울 뿐이라는 점에서는 IMF의 지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재벌문제를 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문제로 접근하고 소유문제로서 접근하지 않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죠.

또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IMF의 근본적인 제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초국적 자본의 자유화 운동 보장, 대규모 정리해고, 고실업, 고물가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입니다. 김대중 정권의 개혁성이 정치적으로 얼마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이미 아닙니다. 객관적 지표상 몇 개월 지나면 대립적 구도가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대중 정권측에서 시민운동단체들을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진보진영이 자기 발로 서지 않는 한 근본

적 사회개혁 같은 것을 폭넓게 논의하기 힘든 시점입니다. 민주노총의 경우 지도부 문제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지니고 있지만 고용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면서 전체 전선을 선도적으로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른 진보진영이나 시민운동 등과 함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러한 고민을 나눠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기 1960년 생. 서울대 자연대 졸업. 동 대학원 사회학(문화비평) 박사. 현재 한일신학대 교수. 『현대사상』 주간. 저서로 『포스트모더니즘과 비판사회학』, 『패스트푸드점에 갇힌 문화비평』,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등이 있음.

최규업 : 정권교체가 되어나서 진보진영의 위기를 강하게 느끼는데, 그럼 점에 서라도 진보의 정체성을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민주노총 내부에서조차도 김대중 정권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협력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싸울 것보다는 협력할 것이 더 많다”고 하면서 김대중 정권을 동지로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에 반해 “협력할 것보다는 싸울 것이 더 많다”면서 동지가 아니라고 보는 이들이 있죠. 저는 그 중간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 정권을 견인할 힘이

없는 한 협력할 측면보다는 싸워야 할 게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의 성격은 선거 때 내건 공약이 잘 말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신한국당이나 국민신당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대를 하고 논쟁까지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춘 : 우리 진보운동이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

니다. 30년간 반독재만을 말하던 운동이, 세계사적 전환기와 국내적으로는 정권교체기와 맞물리는 상황에서, 이제야 자기 노선, 이념을 정립해야 될 시점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 하나는 역시 조직화된 대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노조에 조직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진보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시킬 것인가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적 기반의 확보가 전제된 새로운 정치공간이 관건이라고 할까요. 김대중 정권과 수구세력을 분리시키는 작업도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최규업 : 회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승리21이 얻은 30만 표는 실패였음은 분명하죠. 하지만 적어도 진보진영에선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았고, 돈도 없었던 불리한 조건도 인정해야죠. 국민승리21을 정치조직으로 전환하고 회원제를 하기로 한 것 등은 국민승리21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과장해선 안 되겠지만, 대공장 노동자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낸 것은 커다란 성과거든요. 또 그때 더 많은 표를 권영길 후보에게 밀어줬다면 현재의 싸움에 보다 힘이 붙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선진노동자들도 많이 있고요.

김동춘 :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것이지만 정당 만들기라는 게 사실 정당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만들기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슈를 사회적 이슈로 결합시켜서 시민사회에 침투하는 게 관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정치' 하면 대통령 누구 뽑을까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들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사람들을 조직해 내는 게 민주노총과 전체 진보진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IMF 국면을 맞으면서 기업별 노조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남에 따라 산별노조라든지 실업자 운동을 조직할 필요성이 분명해졌으니 이제는 이를 어떻게 주워담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실천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조직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현 : 87년 이후 진보운동 10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IMF 사태에 맞는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흐름이 한 편으로는 무조건 분노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장을 조직하기보다는 즉자적으로 해온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반성되는 대목입니다.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대안을 갖고 조직화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절망에 가득찬 폭동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많다고 봐요. 이에 반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희망을 정권과 화해해서 적당히 챙기는 것쯤으로 여기는 다른 한쪽 흐름도 있고요. 무엇보다 정치세력화, 사회개혁 같은 과제들에 대한 책임있고 진지한 자세가 문제라고 봅니다.

김성기 : 진보이론은 사회의 다른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학계에서 훨씬 공정하게 논의될 수 있었으나 학계마저 지식인의 권력과 특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체제로 탈바꿈하는 듯싶습니다. 이에 진보를 향한 열망이나 열정은 다분히 체제내화되어 기껏 상투적인 저항주의로 그치고 말 따름입니다. 이 상투적인 저항주의와 달리 시대와 사회와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일, 이로부터 향후 진보진영이 공론화할 논의 지평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춘 : 지금 우리 사회 진보운동에게는 대중들의 불만과 좌절감을 담아서 희망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이념과 노선의 정립이 매우 시급하고, 지식인들이 그러한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서양사람들과 같은 지평에서 진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배우기보다는 우리의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장시간 토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